

독일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및 가정폭력 통계 발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지난 11월 25일, 국제사회는 16번째 ‘여성폭력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맞이하였고,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캠페인과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비단 유엔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가입국들은 2011년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철폐·예방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을 체결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원국들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 및 동향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 내 국가 실제 사례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번 기회에는 독일을 선정하여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¹⁾

2016년 새해맞이 행사 당시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여성단체들로부터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올해 7월에는 601명의 하원의원 전원 찬성으로 성폭력(sexual violence) 용의자에 대한 기소 절차를 간소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기존법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용의자가 본인을 협박하거나 도망갈 수 없게 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본인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했던 것이다. 혐의 입증 문턱이 높은 탓에, 실제 10건의 성폭력 중 1건 정도만 법원에 보고되고, 이 중에서도 약 8%만이 유죄판결이 났다고 한다.

법 개정에서는 그 절차가 보다 쉬워졌다. 본 법안에서는 성폭력(rape)을 “싫으면 싫다는 의미이다(*Nein heißt Nein*, No means no)”라는 원칙이 더욱 명백하게 반영되었으며, 여성의 의지에 반해 이루어지는 경우 성폭력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160여개 이상의 성폭력 관리센터들, 여성대상 상담센터들이 모여 조직된 전국연합(*Bundesverband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Germany's federal association of rape crisis and women's counseling centers*)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기소 절차에서 더 이상 입증 요건을 다 충족

1) 원문 자료들에서는 violence against women, 즉 여성대상 폭력으로 명백하게 번역할 수 있는 반면, gender-based violence, 젠더기반폭력이라는 보다 광의의 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혼용한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원문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정책 등을 의미하는 경우에 한해 여성대상 폭력으로 해석하여 본 에세이를 작성함.

시켜야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지가 반해 발생하는 경우만으로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된다”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었다고 환영하였다.

2016년 11월,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연방 경찰이 독일 내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데이터를 공개했다. 연방범죄수사경찰청(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BKA)과 내무부 장관(German Minister for Family Affair)이 11월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 127,457명이 살인, 치명적 상해, 강간, 성추행, 위협 또는 스토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2%에 이르는 약 10만4천여 명이 여성이었다. 피해 사례 중에서는 6만5천여명이 단순 부상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으나, 351명의 여성은 고의로 또는 우발적으로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 발표에서 내무부 장관 마누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는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이고 계속 추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락함을 느껴야 하는 집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많은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현실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언급을 터부시하는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15개 언어로 익명 무료 상담 및 지원이 제공되는 핫라인 ‘Das Hilfetelefon Gewalt gegen Frauen (Help line violence against women)’로 꼭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독일에서는 다양한 상담 및 보호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나아가 가족노인 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의 지원을 받는 여성의 집 연합 (Association of Women’s Shelters (Frauenhauskoordinierung e.V. - FHK e.V.) 도 비단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폭넓은 차원의 여성 및 아동대상 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 여성보호센터들에게 법률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여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 1년에 하루 국제적으로 여성폭력 철폐라는 기념비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의미 있겠으나, 관련 법률 개정,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 및 사례 관리 등과 같은 보다 긴 정책적 호흡을 이끌어가고 있는 독일의 모습에 주목할 만하다.

※ 참고자료

DW News (2016), “Domestic violence affects over 100,000 women in Germany,” 2016년 11월 22일자, <http://www.dw.com/en/domestic-violence-affects-over-100000-women-in-germany/a-36482282> (접속일: 2016년 12월 11일)

Rauenhauskoordinierung e.V. 웹사이트,

<http://www.frauenhauskoordinierung.de/english-summary.html> (접속일: 2016년 12월 11일)

Melissa Eddy (2016), "Germany Passes 'No Means No' Law After Cologne Attacks," New York Times, July 7 2016,

http://www.nytimes.com/2016/07/08/world/europe/germany-rape-law.html?_r=0 (접속일: 2016년 12월 12일)

Bundesverband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BFF) 웹사이트,

<https://www.frauen-gegen-gewalt.de/home.html> (접속일: 2016년 12월 12일)

[해외통신원 12월 원고] 프랑스

프랑스 아이슬란드에 이어 남녀임금격차 개선 시위 개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지난 10월,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오후 2시 38분에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일제히 걸어 나와 수도 레이캬비크(Reykjavik) 내 광장에 모여 남녀 임금격차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비단 아이슬란드 내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사례들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이다. 지난달 11월 7일, 프랑스에서는 아이슬란드 시위 전례를 바탕으로 한 남녀임금격차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것이다. 과연 프랑스의 남녀임금격차 현황과 해결과제로는 어떠한 점들이 있을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크게 경제, 교육, 보건, 정치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성 평등 정도를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프랑스는 2016년 발표기준 144개국 중 1점 만점에 0.755점으로 17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다 세부적인 지표별 현황이다. 교육이나 보건 분야에서는 성 격차지수가 각 1점 및 0.98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경제참여 및 기회의 균등이라는 부분에서는 무려 64위로 그 순위가 대폭 하락하였다. 남녀임금평등 문제의 경우, 144개국 중 134위로 나타났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프랑스 내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여성들은 11월 7일 오후 4시 34분, 하던 일을 멈추고 공화국광장(Place de la République)에 모였다. 현재 프랑스의 남녀임금격차 문제를 근무일로 환산하면, 11월 7일 오후 4시 34분부터 프랑스 여성들은 연말까지 급여를 받지 않고 무임금 노동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남녀임금격차 개선 속도라면, 2186년이 되어서야 동일직종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프랑스 내 여성단체 Les Glorieuses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프랑스 남녀근로자간 평균 시급 격차는 15.1%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시급을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38.2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의미로 환산될 수 있다. Les Glorieuses 설립자 Rebecca Amsellem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격차를 환산한다면 약 10일 남짓에 해당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무려 한 달 반에 이른다는 점은 놀라운 수치이다” 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과연 프랑스에서는 남녀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물론 법적 기반은 조성되어 있다. 2001년에는 남녀 경력 평등법 (Law on Professional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을 제정했으며,²⁾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에서는 임금협상에 앞서 매년 남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2006년에는 남녀임금평등법 (Law on the equal payment of women and men)이 제정되었다.³⁾ 본 법안은 보다 직접적인 차원에서 남녀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노력이 가시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1970년대에 노동법(Labour Code, *Code du Travail*)이 개정될 당시에조차도 남녀 근로자 노동은 동일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녀임금 문제에 있어 법과 현실간의 간극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내 여성 근로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48%인 약 1,3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원칙상 고용주가 외형적 특성, 인종, 신체적 장애, 그리고 성별 등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남녀임금격차가 상당히 남아있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우선 여성의 노동 자체가 평가절하 되어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의 경우 대개 임금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임금이 낮은 파트타임 또는 비숙련 직종에 근로하는 여성들의 비율 역시 높은 편이며, 육아 및 가사노동과 같은 일·가정 양립 문제, 직장에서의 성차별,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량적인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으나 경제적 역량, 특히 남녀 임금 관련 지표가 교육, 보건과 같은 타 분야의 성 평등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남녀임금 평등 문제가 프랑스의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 넘어야 할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BBC (2016), "Why did some French women walk out of work early?" 2016년 11월 7일자,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7894042> (접속일: 2016년 12월 18일)

2) Loi n° 2001-397 du 9 mai 2001 relative à l'égalité professionn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3) Loi n° 2006-340 du 23 mars 2006 relative à l'égalité salaria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es

European Commission (2013). The current situation of gender equality in France: Country profile 2013, available at

http://ec.europa.eu/justice/gender-equality/files/epo_campaign/131203_country-profile_france.pdf (접속일: 2016년 12월 18일)

Kim Willsher (2016), "Top French offices stop work in support of gender pay gap protes," The Guardian 2016년 11월 7일자,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nov/07/french-women-walk-out-work-pay-disparity-gender-pay-gap-equality> (접속일: 2016년 12월 18일)

Tony Cross (2016), "French women follow Iceland in fighting gender pay gap," Radio France Internationale, 2016년 11월 7일자,

<http://en.rfi.fr/france/20161107-french-women-follow-iceland-fighting-gender-pay-gap> (접속일: 2016년 12월 18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넘어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최근 국내외에서 여성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각 사회의 여성 지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여성 국가원수의 여부, 남성 대비 여성 정치인 및 장관 수의 비율, 혹은 더 나아가 여성 CEO의 비율까지 단골 소재로 언급된다. 일례로 국제의원연맹(IPU)은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193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평균 23%로 집계했다. 본 집계에서 스웨덴은 6위에 올랐다. 스웨덴 여성 의원들은 총 349개 의석 중 152석을 확보하여 국민의 43.6%를 대표하고 있다. 이는 르완다, 볼리비아, 쿠바, 아이슬란드, 니카라과 다음으로 높은 대표성이며, 17%로 112위에 머문 한국 실정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무엇이 스웨덴 여성들의 정치 대표성을 높였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스웨덴의 선거제도, 복지제도 등의 제도적 요인을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 단원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은 특정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호투표제와 신인 정치인에게도 정계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여성후보자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정치 참여를 활성화 시켰다는 분석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각종 복지제도 확대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들의 자발적 할당제 도입은 스웨덴 여성들의 높은 정치참여를 이끈 가장 흥미로운 추동 요인 중 하나이다. IPU에서 집계한 여성국회의원 순위 내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은 입법을 통한 여성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의 변화는 법적 강제성이 아닌 정당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작되었다. 1970년대 사민당과 자유당에 의해 여성할당제 논의가 활성화 되었고, 1980년대 좌파당과 녹색당에 의해 당선자 내 여성할당제가 최초 도입 되었다. 이후 1990년대를 거쳐 모든 정당은 여성할당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거나 적어도 정당 내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였다. 일부는 이를 두고 포폴리즘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여성 유권자의 표를 인식한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앞 다투어 경쟁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 간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주춧돌이 되었다.

스웨덴에서도 여성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더딘 속도로 향상되자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제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서서히 압도했다. 그런데 스웨덴 정당들의 출선수범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 대표성의 확보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반기업 내 여성의 지위를 들 수 있다. 2015년 기준 스웨덴 여성고용률은 78%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업 내 스웨덴 여성 CEO의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30%에 그쳤다. 같은 해 공공영역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평균 62%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겨우 절반의 성과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국회 의회에서도 통상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국방, 재정 등에서 여성의 비율은 각각 29%, 35%에 그치는 반면, 보건복지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무려 59%에 육박했다. 성평등 사회로 타국의 모델이 되고 있는 스웨덴에서도 여성들의 지위 개선 속도와 변화 방향의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단순한 숫자 싸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여성쿼터제 같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역시 여성정치인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각종 여성친화적인 복지제도, 그리고 정당 내 할당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왔지만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한 여성리더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진정한 성평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스웨덴이 어떠한 제도적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국제의원연맹 <http://www.ipu.org>
스웨덴통계청 <http://www.scb.se>
Sweden, S. (2016). På tal om kvinnor och män. Stockholm: SCB.
기타
<http://kvinfo.org/history/women-nordic-politics-continuing-success-story>
Potter, M. (2014). The Swedish General Election 2014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Törnqvist, M. (2007). Varannan damernas väg till riksdagen. En romantisk historia. Tidskrift för genusvetenskap, (4), sid-24.